

현영철 숙청과 김정은 정권 위기 요인

Online Series

2015. 5. 13. | CO 15-10

조한범(통일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북한 인민무력부장 현영철이 지난달 30일 반역죄 명목으로 전격 처형되었다. 이밖에 마원춘 국방위 설계국장, 변인선 총참모부 작전국장, 한광상 당 재정경리 부장 등 김정은 측근 고위 간부들이 숙청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정사실화되었던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도 성사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최근 비교적 안정된 것으로 평가되어오던 김정은 정권의 권력기반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정은의 러시아 전승 기념일 참석 불발

지난 5월 9일 러시아 전승 기념일에 김정은 제 1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았다. 러시아가 김정은을 공식 초청한 직후부터 참석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으며, 최근에는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였다. 특히 러시아 고위 당국자 차원에서 김정은의 참석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언급되었다. 예상과 달리 김정은의 집권 3년 차가 특이 동향 없이 경과하고 있다는 점도 그의 방러 가능성을 높였다. 북한군 야전 총책 리영호와 실세 장성택의 숙청, 측근들에 대한 반복적인 강등과 복권, 그리고 고위층의 지속적인 처형 등은 김정은이 권력기반을 장악했다는 추론의 징표로 제시되었다. 급격한 식량위기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평양 등 일부 지역의 경우 경기가 활성화되는 조짐이 나타나는 등 경제상황도 안정화되는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최근 들어 활발해진 리수용 외무상의 외교활동과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반동회의 참석 등을 근거로 권력기반을 다진 김정은이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김정은이 러시아 전승 기념일 뿐만 아니라 9월 중국의 대일 전승 기념일에 대한 참석가능성도 제기되었다. 기정사실화되던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자 일부에서는 북러관계의 이상설을 내 놓았다. 김정은의 경호문제와 무기공급에 대한 양국 간의 이견 등도 그 이유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북한과 러시아는 모두 양국관계를 발전 시켜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 북한은 국제적인 대북제재, 남북관계 교착의 장기화와 북중관계 악화 상황의 타개를 위해 대러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러시아 역시 푸틴체제의 중점 국정과제인 시베리아 극동개발의 실현을 위해 북한과의 협력이 절실하다. 양국 간의 이견으로 김정은의 방러가 실현되지 않았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시아는 김정은의 방러 가능성을 처음부터 확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얼마 전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가 김정은의 참석 가능성을 언급했을 때에도 ‘아마도’라는 수식어를 달았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을 포함한 서방의 주요 국가들이 대거 불참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러시아 측의 언론플레이였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북한은 러시아의 초청에 대해 단 한 번도 공식적인 수락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 러시아는 김정은의 불참 이유에 대해 ‘북한 측 내부 사정’이라는 점을 밝혔다. 이는 김정은이 마음대로 평양을 비우기는 아직 이르다는 의미일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성

김정은 정권의 안착에 대한 다수의 평가와 달리 정치·경제적인 차원에서 불안정성은 상존하며, 일부 악화되고 있다. 우선 정치부문의 경우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측근들에 대한 강등과 복권, 그리고 공개처형 등은 안정적인 철권통치를 입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역사적으로 이 같은 상황은 정권 말기에 나타나며, 권력기반의 취약성을 상징한다. 신뢰할 수 있는 측근들에 대한 지위의 강등과 복권은 불필요하며, 오히려 자발적인 충성심을 약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위직에 대한 지속적인 유혈 숙청은 보다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김정은은 2012년 17명, 2013년 10명, 2014년 41명, 그리고 올해 이미 15명의 고위층을 처형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김정은의 지시에 이의를 제기하여 제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김정은 정권의 '조기 경보기능'의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위층들은 김정은의 무리한 지시나 위협성이 있는 정책에 직언을 하지 않을 것이며, 결국 그 피해는 정권의 기반약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고위직에 대한 충원이 빈번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충성도의 검증이 어렵게 되고, 결국 권력층의 결속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평양 등 북한의 일부 지역에서 관측되는 경기 활성화 현상은 일시적인 착시일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비공식적 시장화는 배급제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소비재, 서비스, 부동산 등 최종 서비스 부문이 주도하고 있으며, 노동, 금융, 자본재 부문의 변화는 미미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2009년 화폐개혁 이후 시장이 음성화됨으로써 시장경기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조세 및 준조세 형식으로 확보하던 국가 재정수입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정경유착형 빈익빈 부익부 구조로 인해 취약계층의 생활이 악화되고 있다. 탈북자를 기준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직장에서 받는 공식소득이 전혀 없는 층이 2011년과 2012년 각각 25.7%, 25.2%에서 2013년 51.9%로 급증했다. 뿐만 아니라 비공식 소득을 포함하여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이 2011년과 2012년 각각 17.1%, 16.5%에서 2013년 24.1%로 증가했다. 금년 4월 초 유엔은 북한 인구의 70%가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발표했다. 비공식적 시장화의 진전으로 일부 정경유착형 부유층이 형성되고 있는 데 반해 대다수 북한주민의 생활은 악화되고 있으며, 국가 역시 재정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북한의 대외 교역 역시 상황이 좋지 않다. 북중 교역은 북한의 대외 교역의 90%이며, 이 중 석탄은 대중 수출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북한의 대중 수출은 줄어들었으며, 북중 물류의 80%가 통과되는 단둥의 북중 인적 교류가 20%이상 감소했다. 특히 북한의 2014년 대중 석탄 수출은 전년 대비 18% 감소한 11억 3천만 달러에 그쳤다. 대중 석탄 수출 감소는 석탄의 국제가격 하락, 중국 경기 둔화, 그리고 환경 규제 강화 등의 구조적 요인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 북러 교역은 2014년 1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해 65억 달러 수준인 북중 교역에 비해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6만 명 내외로 추산되는 해외 송출 근로자들이 벌어들이는 돈은 북한의 주요 경화 획득 수단으로 연간 수억 달러 규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유가 하락에 따른 러시아 루블화의 폭락으로 북한의 해외 송출 근로자 중 다수를 이루고

있는 러시아 벌목공의 임금이 크게 감소했다는 점도 북한 당국에게 재정적 압박이 되고 있다.

김정은의 권력기반: 국가안전보위부와 노동당 조직지도부

고위직에 대한 강등과 복권을 반복하는 소위 ‘견장정치’는 김정은 통치행태의 특징이다. 금년 4월 윤동현 인민무력부 부부장은 계급이 중장으로 강등됨으로써 3년간 6차례의 강등과 승진을 반복했다. 천안함 폭침과 소니사 해킹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영철 정찰총국장도 2012년 4월 대장 진급 이후 금년 4월까지 대장, 중장, 대장, 상장으로 계급이 변화했다. 박정천 부총참모장은 중장, 상장을 거쳐 최근 소장으로 강등되었다. 처형된 현영철 인민무력부장과 리영길 총참모장 등 군 최고 수뇌부 중 계급 강등을 경험하지 않은 사례를 찾기 힘들다. 견장정치는 군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군부에 대한 확고한 장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 북한 공안기관의 핵심인 국가안전보위부와 노동당 조직지도부의 수장들은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변동이 없다. 김원홍이 수장으로 있는 국가안전보위부는 최고 정보기구라는 점에서 북한 공안기관의 핵심이다. 김원홍은 장성택과 리영호 등 김정일 체제의 최고 수뇌부들이 모두 사라지거나 지위의 강등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위에 변화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 특히 국가안전보위부는 장성택의 숙청과정을 집행했다.

노동당 조직지도부는 당, 군, 내각, 기타 사회조직 전반의 인사를 총괄하는 핵심기관이다. 1974년 김정일이 후계자로 등장했을 때의 직함도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이었다. 리제강 전 조직지도부 제 1부부장은 당시 조직지도원으로 이때부터 김정일과 호흡을 같이했으며, 2004년엔 사생활과 분과 행동을 명분으로 장성택의 업무정지 처분을 주도했다. 노동당 조직지도부는 장성택이 장악한 당 행정부와 갈등적 경쟁관계를 형성했으나, 김정일의 뇌졸중 발병 이후 권력구도가 장성택계로 급격하게 기울었다. 2010년 리제강이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고 그의 측근들에 대한 숙청이 이루어졌을 때 ‘장성택의 작품’이라는 설이 북한에 유포되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리제강의 측근이었던 조연준 제 1부부장이 조직지도부의 수장을 맡고 있으며,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조연준은 장성택

숙청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장성택 처형 이후 과거 숙청당했던 조직지도부 인사들을 복권시켰다. 김정은 집권 이후 승진 가도를 달려온 인민군 총정치국장 황병서 역시 조연준과 오랫동안 조직지도부에서 호흡을 같이했다는 점도 주목의 대상이다.

김정은의 변덕스러운 ‘견장정치’ 속에서도 노동당 조직지도부와 국가안전보위부는 무풍 지대로 남아있다는 점에서 김정은 공안정치의 핵심적 기반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경제적, 정치적 불안정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공안기관에 의존한 통치방식은 구조적으로 취약하다. 선대인 김정일이 북한 정권 최대의 위기인 고난의 행군기를 넘길 수 있었던 것은 북한 군부를 확고하게 장악했기 때문이었다. 김정일은 군을 앞세우는 ‘선군정치’를 십분 활용하면서도 북한군에 다양한 경제적 이권과 사업권을 줌으로써 충성을 유도했다. 군의 특성상 완전한 장악은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며, 성패 여부도 장담하기 어렵다. 김정일과 달리 김정은은 군부에 대한 확고한 장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채찍’을 일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취약성이 있다. 공안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김정은의 정권 기반이 안정된 것으로 평가하기에 이른다.

김정은 정권 위기 전망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 대통령은 대중 봉기 12일 만에 부인과 함께 처형되었다. 차우세스쿠 정권 말기에 권력투쟁이나 쿠데타 등 불안정 징후가 없었다는 점에서 붕괴과정이 적극적이다. 1989년 12월 루마니아 수도의 공개 집회가 반 차우세스쿠 봉기로 변질되면서 차우세스쿠는 유혈진압을 명령했으나 군부는 이를 거부했다. 비밀경찰과 호위 세력 등 차우세스쿠 핵심 지지 세력들이 군부와 물리적으로 충돌했으나 패배했다. 차우세스쿠 체제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던 공안세력들은 루마니아 군부의 군사적 물리력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었다. 이 같은 사례는 북한에도 일정한 시사점이 있다.

정치·경제적인 차원에서 여전히 불안정한 요인들이 상존한다는 점에서 김정은 정권의 기반은 확립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특히 군부를 완전히 장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북중관계의 냉각과 남북관계의 장기교착으로 북한이 필요로 하는 외부 자원의 확보에도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다. 북한이 외자유치를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경제개발구 사업 역시 대북제재의 지속과 국제시장의 신뢰 상실로 인해 미래가 불투명하다. 비공식적 시장화

진전도 국가 재정 확충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생활고가 심화되고 있으며, 정경유착형 빈익빈 부익부 구조는 사회갈등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다. 250만 대에 달하는 휴대전화와 외부 사조의 유입 양상도 과거와 다른 변화의 지형을 형성하고 있다.

김정일의 경우 장기간의 집권 과정과 후계 수업을 통해 국정운영 능력을 확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심복들을 길러냈으며, 특히 군부를 확고하게 장악했다. 이 같은 능력은 고난의 행군 등 정권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했다. 반면 김정은의 경우 권력 승계 기간이 매우 짧고 충분한 국정운영 능력을 습득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 지속적인 유혈 숙청은 권력 엘리트층의 결속력을 약화시킬 개연성이 있으며, 특히 군부에 대한 장악 여부는 불투명하다. 따라서 우발적인 대중 봉기 등 북한 내 급변 요인이 발생할 경우 선대와 달리 김정은이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김정은 정권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KINU 2015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